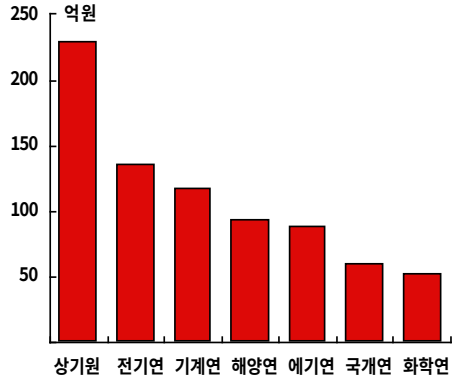
개선 '97 :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비효율의 상징 출연연구기관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 공업화정책을 시행하면서 고급두뇌가 태부족,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거나 외국의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고급인력을 스카웃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
이 과정에서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연구여건이 형편없는 국내실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혜를 주었고, 이 덕택에 우수한 고급두뇌를 많이 유치해 국내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거나 재벌 소유의 대기업에 배치돼 활동했고, 일부는 지금도 근무중이거나 주요 간부로서 역할하고 있다.



정부는 80년대 중반이후 국내경제의 성장으로 근무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해외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특혜부여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고 있으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의 중요성을 인식, 이후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기업 소속 연구기관 근무자들에게는 군복무를 면제해주는 등 일부 특혜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특혜조치가 정상궤도를 벗어나고 있음은 물론 국민정서상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원 재학 또는 연구기관 근무를 조건으로 한 군복무 면제조치의 악용은 이미 일반화되어 폐지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고, 연구의 비효율성과 비적합성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이며, 정부재정을 축내는 필요악의 존재로 까지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생산기술연구원 등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자체 수입을 아예 누락시키거나 적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지난 2년동안 정부로부터 약 1000억원의 출연금을 더 받아낸 사실을 적발, 이들 연구기관들이 부당하게 받아낸 출연금으로 직원수당을 기준보다 인상하거나 특별판공비로 쓰는 등 국가예산을 낭비해 온 것으로 발표했다.
감사원은 97년4월 30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생산기술연구원 등 25개 연구기관이 총지출 대비 자체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출연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을 악용해 95~96년 2년동안 자체수입을 999억9700만원이나 적게 계상해 신고한 뒤 그만큼을 정부 출연금으로 더 받아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금 과다 수령액은 생산기술연구원이 230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한국전기연구소 136억여원 △한국기계연구원 117억여원 △한국해양연구소 94억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89억여원 △국토개발연구원 60억여원 △한국화학연구소 52억여원 등의 차례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기관들은 또 과다하게 받아낸 출연금으로 여유 재원을 확보한 뒤 이것이 마치 경영성과로 인한 초과수익인 것처럼 계산해 직원들의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고 기관장의 판공비로 전용하거나 특별판공비와 국외여비 등을 기준보다 초과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30개 연구기관에서 연구직은 정원에 비해 부족한 반면 관리직 같은 지원인력은 3331명으로 정원보다 623명을 초과하고 있으며 초과인력 인건비로 해마다 135억여원이 지출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대한 시정도 요구했다.
감사원은 재정경제원과 해당 연구기관에 철저한 예산편성과 관리, 수당과 판공비 등의 예산내 집행 등을 요구했으며, 98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군복무 부정이나 편법 예산지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닐 것이다.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으며, 관련 정부부서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이다. 심지어는 연구기관의 장들이 연구의 효율성 제고나 장기비젼의 수립으로 평가받기보다는 편법예산 확보능력, 즉 로비력에 따라 평가받을 정도에 이르고 있을 정도이다.

기초 · 응용과학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화학저널 1997/7/21>